

요 약

- 우리 경제는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17년과 18년에 각각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1%대 후반의 상승률을 기록하겠으나, 낮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완만한 성장세로 인해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폭이 890억달러 내외로 축소될 전망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가 개선되었으나,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작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2.6%)에 비해 하락한 전년동기대비 2.4%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대비(연율)로도 2.0%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냄.
 -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이 양호한 가운데 제조업도 일부 업종에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점차 둔화되면서 경기개선을 제약하고 있음.
- 내수는 투자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나, 민간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회복세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투자 개선이 특정 부문(건축과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음.
 - 반면,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소비자 심리도 위축됨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수출은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일부 축소됨.**
 - 대외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반도체산업의 호황도 지속되면서 수출물량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액 기준 수출입도 유가상승으로 크게 확대됨.
 - 경상수지는 국제유가를 중심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흑자폭이 일부 축소되고 있으나, 내수 개선세가 미미함에 따라 큰 폭의 흑자 추세는 유지됨.
- 국내 금융시장은 **장기금리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외환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이 1%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2%까지 상승폭이 확대됨.
- 임금근로자의 증가세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된 반면, 자영업자는 빠르게 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
- 세계경제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하방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회복세는 제한된 범위에 머무를 전망
 - 세계 교역량과 산업생산이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 선행지수도 기준치(100)에 도달하면서 세계경제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 그러나 미국의 통상정책, 중국의 과잉투자 문제, 유로존의 브렉시트 협상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위험 요인은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다양한 무역구제조치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 간 통상분쟁으로 세계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
 - 이 경우, 과잉투자·과다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중국에서 급격한 부채조정·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도 존재
- 이러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 부문은 외부 충격에 점차 취약해지고 있음.
 - 고령화가 진행되며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최근에는 생산성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
 - 아울러 가계부채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이 지체되며 한계기업이 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부실이 누적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방위험도 상존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거시경제정책을 활용한 수요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주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이와 함께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파생되는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실업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정책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

II. 2017~18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세계경제는 2017년과 18년에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제
 - IMF는 세계경제가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7년과 18년에 2016년(3.1%)보다 소폭 높은 3%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원유 도입단가는 2017년과 18년에 각각 연평균 배럴당 54달러와 58달러 내외를 기록하여 금년에 전년대비 32% 정도 상승한 후, 내년에는 7% 상승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17년에 4% 정도 상승한 후, 2018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2. 2017~18년 국내경제 전망

- 우리 경제는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17년과 18년에 각각 2.6%와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17년의 경우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인해 수출이 개선되겠으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되면서 2016년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18년에는 수출과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 전반이 점차 둔화되면서 2017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
 - 민간소비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실질소득 개선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 2016년 소비 활성화 정책의 효과도 사라지면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수출이 완만하게 개선되겠으나, 제조업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최근의 양호한 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최근의 높은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부 품목의 높은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세계경제 성장률이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 경상수지는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흑자폭이 축소되겠으나, 여전히 대규모 흑자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1%대 후반의 상승률을 기록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성장세도 완만함에 따라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 변화,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작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거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
 -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세계교역을 둔화시킴으로써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대는 금융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 투자성향 등을 약화시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
 -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부채상환능력이 낮은 한계 가구 및 기업 등 취약 부문이 빠르게 부실해질 경우, 외부 충격의 부정적 파급은 더욱 증폭될 수 있음.

2017~18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15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기대비)	2.8	2.8	2.6 (0.7)	2.6 (0.6)	2.6	2.5
총소비	2.4	2.9	2.1	2.3	2.2	2.4
민간소비	2.2	2.5	1.8	2.1	2.0	2.1
총고정투자	5.1	5.2	7.2	3.3	5.1	2.3
설비투자	4.7	-2.3	8.0	0.7	4.3	1.7
건설투자	6.6	10.7	8.4	4.7	6.4	2.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8	2.3	2.7	2.6	2.7	2.9
총수출(물량)	-0.1	2.1	4.4	3.6	4.0	3.6
상품수출(물량)	-0.6	2.2	6.0	3.8	4.9	3.4
총수입(물량)	2.1	4.5	6.4	4.7	5.5	3.6
상품수입(물량)	0.7	3.6	8.0	4.5	6.2	3.6
경상수지	1,059	987	472	422	894	834
상품수지	1,223	1,204	628	537	1,165	1,112
수출(금액)	5,429	5,118	2,847	2,862	5,709	5,904
(증가율)	(-11.4)	(-5.7)	(15.5)	(7.9)	(11.6)	(3.4)
수입(금액)	4,206	3,913	2,219	2,325	4,544	4,792
(증가율)	(-19.8)	(-7.0)	(20.6)	(12.2)	(16.1)	(5.4)
서비스수지, 본원·이전 소득수지	-163	-218	-155	-115	-270	-278
소비자물가	0.7	1.0	2.0	1.6	1.8	1.5
근원물가	2.2	1.6	1.5	1.5	1.5	1.4
실업률 (계절조정)	3.6	3.7	4.1 (3.8)	3.5 (3.8)	3.8	3.8

주: p는 잠정치.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은 신중한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당분간 2017년 본예산에 맞추어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한편,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따른 재정소요는 정교한 기획과 제도적 보완을 거쳐 향후 예산안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

■ 한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가운데 장기재정전망이 함의하는 재정개혁 과제를 중단기 예산에 반영할 필요

- 재정준칙의 도입은 총량 수준의 재정규율을 명시적으로 확립하고, 장래 의무지출과 재정조달방안의 연계를 보완할 경우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보다 현실적인 장기재정전망을 수행하는 가운데, 향후 재정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의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개혁을 중단기 예산에 반영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주요 세목에 대한 조정을 포괄하는 정책조합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자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향후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세부담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민의 조세부담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시키는 재정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증대가 불가피할 경우, 여러 세목의 조세지출 및 세원확대 등 포괄적인 세제합리화를 통해 조세부담을 분산시킬 필요

2.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최근의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때까지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

- 물가상승률이 금년 들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근원물가가 여전히 1%대 중반에 정체되어 있어 향후 물가상승세가 재차 둔화될 가능성
- 최근 국내외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그동안 누적된 마이너스 총수요 압력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대내외 하방위험도 여전히 높은 상황
-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이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금융정책

■ 최근 강화된 비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여 가계 신용의 빠른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

- 가계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잠재적인 금융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화할 필요
- 이와 함께 가계신용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부실가능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완충자본 또는 추가충당금의 적립을 요구할 필요

■ 한편, 기업구조조정은 납세자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주주의 손실흡수력을 평상시에 비축할 필요**

- 대형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납세자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와 함께 도덕적 해이와 재정건전성 훼손을 초래하므로 이해당사자의 비용부담 원칙을 확립해야 함.
-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평상시에 주주의 손실흡수력을 비축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부실이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회생·정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